

# 전남 교육기본소득 도입 추진의 경위와 효과

## 고두갑

목포대 경제학과  
교수

전남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본소득’ 공약이 전남 교육감에 선거에서 등장하고 공약을 내놓은 현 김대중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전남지역 초·중·고 학생 숫자는 2019년 19만 3370명, 2020년 18만 7567명, 2021년 18만 4981명까지 줄었다. 학생 수 감소로 위축되고 있는 전남지역 교육현장 위기에 대응하려면 학생에게 직접 투자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대중 교육감의 판단이었다. 당시 김대중 후보는 논평을 통해 “전남 교육기본소득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다”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선적으로 교육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 중에 학생 교육기본소득 재원을 놓고 많은 공방이 이루어졌다. 장석웅 예비후보측은 올해 초·중·고 학생 약 18만 4000여명에 대한 연간 기본소득 예산은 44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말도 안되는 공약이라고 비판했지만, 전남 도민은 교육기본소득 공약 내건 김대중 후보를 선출했다.

전남은 교육기본소득과 유사한 지역소멸위기 대책으로 전국 최초로 ‘농어민 기본수당’을 시행했으며, 신안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타 지역에 비해 높다고 생각된다.

전남 교육청은 현재 '전남 교육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중이다. 중장기적으로 초·중·고 학생 1인당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우선 지역소멸위험 지역 초등학교 입학생 1인당 매월 20만 원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초등학교 학생 9만여명 중 16개 소멸위험 지역 초등학교 학생 2만 4천여명에게 월 20만 원씩 240만 원을 지급하면, 매년 576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를 16개 군으로 환산하면 한 개 군당 평균 매년 36억 원 정도다. 입학하는 초등학생부터 시작한다면 전남 16개 군 전체 소요 예산이 96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올해는 인구활력계획 제출이 5월에 마감되었기 때문에 시기 상 어렵지만, 내년부터 교육청에서 작은 학교에 시범사업으로 96억 원 가량을 교육기본소득을 지원하고 효과를 검토하여 2024~25년 계획에 반영하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 교육기본소득의 추진은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전남교육의 지속가능성 및 지역상생 협조체제 구축이다. 전남 23개 시군 중 16개 군이 인구 소멸지역으로 지역공동체 붕괴와 더불어 많은 농어촌 학교가 폐교되었다. 농어촌지역의 학생수 감소는 '저출산'이라는 자연적 요인 위에 '학령 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이라는 사회적 요인이 겹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제는 지역이 함께 학생들의 삶을 돌보는 체제구축이 필요하고, 찾아가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역주민의 지역교육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데 교육기본소득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지역교육 불평등성 해소 및 농촌교육의 활성화이다. 농어촌 지역 내 남겨진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열악한 학생이 대부분이다. 남겨진 학생들의 기회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지자체와 협치를 통한 전남교육의 활성화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감을 선거로 뽑는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은 중앙과 지방 교육세의 이전지출로 운영되고 있고, 지자체의 행정과 교육은 분리되어 있으며, 광역의회에서 교육위원이 관여하고 있을 뿐이다. 지방자치의 본래의 의미와 지방소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행정과의 협치가 중요하며, 교육기본소득 재원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상품권으로 교육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취약계층 소득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최근 기본소득의 충족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학생들의 기본복지를 위한 여러 제도들이 실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전남 지역의 시군(목포시, 광양시, 보성군, 신안군, 무안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생 100원 버스는 교복지원금이나 입학지원금 같이 자치행정이 학생교육복지에 기여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지자체의 교육복지 정책이 교육기관과 협치를 이룬다면 교육기본소득까지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